

“금융상품 가르치는 것보다 독립 재무상담사 양성 더 중요”

고강희 기자 neoran@joongang.co.kr

『금융교육에 반대하며(Against Financial Literacy Education)』

미국 로올라 법대 로런 윌리스 교수가 2008년 발표한 논문이다. 도발적이다. 그간 금융교육은 투자자 보호의 중요한 수단으로 여겨져 왔다. 투자자가 교육을 받아 금융상품을 제대로 이해하게 된다면 잘못된 투자로 손해 보는 일을 막을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윌리스 교수는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금융교육은 허울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금융교육에 쓸 돈과 시간이 있다면 차라리 금융 당국이 적절한 규제를 마련하는 데 쓰는 게 더 낫다고 강조한다. 한국 투자자보호재단에서 개최한 ‘금융교육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라는 주제의 세미나에 참석하기 위해 발간한 그를 25일 만났다.

도발적인 주장에 찬성보다 비판 많아

-기존 가설을 뒤집는 주장이다. 논문 발표 당시 반응은.

“논문이 여러 매체에 소개되자마자 비난이 쏟아졌다. 기사엔 악담이 달리고 비방 e-메일이 쇄도했다. 그런데 금융권에서 일하는 사람들 가운데선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는 사람이 꽤 있었다. 그렇지만 다들 억양으로 해달라고 하더라. 이름을 말해도 좋다고 한 사람이 있긴 했다. 미국 워싱턴에 있는 비영리 금융교육 조직인 ‘점프 스타트(Jump Start)’의 자문을 받고 있는 루이스 멘델 워싱턴대 교수다. 그는 “그게 현실이라 너무 슬프다”고 내게 말했다. 실제 점프 스타트가 미국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금융교육을 한 후 효과 정도를 테스트했더니 교육을 받은 이들의 점수가 더 한 층계 나왔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이탈리아·벨기에·슬로베니아 등 각 지역에서 논문에 대해 설명해 달라는 요청이 왔다.”

그의 주장에 금융교육에 찬성했던 많은 사람이 좌절했을 듯하다. 실제 그가 지난해 가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씨티은행 주최 세미나에 참석했을 때 말이다. 패널로 같이 앉아있던 씨티은행의 교육 담당 부사장이 토론 중 “당신 주장이 사실이라면 나는 20년 동안 쓸모없는 일을 했던 말이나”며 울먹였다. 금융교육에 공감했던 이들에게는 미안한 말이지만 “투자자 보호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진실에 눈여겨 봐야 한다”는 게 윌리스 교수의 주장이다.

-금융교육이 전혀 필요 없다는 말인가.

“내 주장은 금융교육이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이지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니다. 금융교육도 여러 종류가 있다. 조사해 봤더니 여러 가지 능력 중에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등 기초수학능력을 배운 거의 효과가 없었다. 그런 면에서 한국은 미국보다 나은 상황 아닌가(웃음). 미국에서는 은퇴를 맞은 연령층의 80%가 은행에 연 10% 예금에 200달러를 넣으면 2년 후에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를 계산 못 한다. 아마 기초수학능력이 있는 사람이 예산을 잘 짜기 때문에 과도하게 지출을 안 하고 합리적으로 소비할 수 있기 때문인 것 같다. 그런데도 지금까지는 금융교육이 일반적인 금융 개념과 기술을 가르치는 데

교육 핑계로 감독당국 책임 회피

건강 챙기려고 의사 될 필요 없듯

모두가 금융전문가 될 이유 없어



WHO?

미국 코네티컷주 웨슬리데에서 행정학과 러시아어를 전공하고, 스탠퍼드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졸업했다. 1995년 변호사 생활을 시작해, 99년부터 3년간은 미 법무부 민사부에서 검사로 일했다. 2002년 스탠퍼드 대학에서 강단에 처음 섰으며, 2009년 로올라 법대 정교수가 됐다. 앨런 그린스판 전 미 연방준비제도가 시회(FRB) 의장과 폴 오닐 재무장관 등이 “금융교육을 잘했다더라면 서프프라임 사태에서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었을 거다”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2007년 초부터 금융교육의 효과에 대해 연구하기 시작했다. 2008년 발표된 논문 ‘금융교육에 반대하며’는 파이낸셜타임스·CNN 등 유수 언론에 자주 소개되고 있다.

치중했다. 그게 아니라 금융산업이 얼마나 빨리 바뀌고 있는지를 투자자들이 알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한다.”

-예를 든다면.
“미국의 경우 20년 전에는 은행이 개인의 소득 수준과 상황 능력을 계산해 주택담보대출을 해 줬다. 개인이 자신의 상황 능력을 계산해보지 않아도 은행에서 대출을 승인해 주면 그 자체가 값을 능력이 된다는 것을 의미했다. 그런데 5년 전에는 어땠나. 값을 수 있는지는 따져보지도 않고 ‘숨 쉬는 사람’ 한테는 모두 대출이 나왔다. 개인들은 은행의 바뀐 분위기를 모르고 은행이 대출을 해줬으니까 스스로 돈 값을 능력이 있는 것으로 ‘착각’했다. 그러다 금융위기가 터진 것 아니냐. 그리고 금융상품에 가입하는 습관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지금 나한테 펀드 가입을 권하는 은행 직원이 내 친구가 아니라 영업사원이라는 것을 명심하도록 가르쳐야 한다. 그래서 당장 가입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에게 의견을 물어본 뒤 금융상품에 가입하는 습관을 교육을 통해 길러줘야 한다.”

-그렇다면 금융교육도 하고 다른 투자자 보호 수단에도 신경 쓰면 되는 것이 아닌가.

“효과 없는 금융교육에 관심을 쏟느라 정작 투자자 보호를 위해 진짜 필요한 곳에는 돈과 시간을 못 쓴다. 또 어떤 경우에는 금융교육이 역효과를 내기도 한다. 금융교육을 받자해서 일부 금융기관은 상품 판매에 열을 올린다. 감독당국은 금융교육을 했으니까 할 일을 다 했다며 일종의 ‘면죄부’를 얻는다. 금융교육이 나중에 금융사고가 생겼을 때 발뺌하기 좋은 명분이 셈이다. 투자자는 또 금융교육을 받고 나선 혼자서 잘할 수 있다고 착각해 나중에 큰 손실을 보게 된다. 최근 금융시장은 교육자나 학생·감독당국이 따라잡기에는 너무 빨리 변한다. 건강이 중요하다고 해서 모든 사람에게 의사가 되라고 하지는 않지 않나. 금융이 중요하다고 해서 모두가 금융전문가가 될 필요는 없다.”

-결국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진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의사나 변호사처럼 믿을 만하고 자격이 있으며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재무상담사(financial advisor)가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는 금융회사에 소속된 ‘유사’ 재무상담사가 대부분이다. 그들은 때로 고객들에게 더 비싸고 수수료가 더 높은 상품을 사라고 한다. 자기한테 떨어지는 돈이 더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처음에는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로런 윌리스 미국 로올라 법대 교수는 『금융교육에 반대하며』라는 논문에서 금융교육의 효과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나중에 투자 성과가 좋을 때 추가로 수수료 를 더 받을 수 있는 제도 같은 게 마련돼야 한다. 그래야 투자자의 재무상담사 간의 이해 상충 문제를 막을 수 있다. 감독당국은 재무 상담사 시험과 자격증 제도를 엄격하게 운영 하고 잘 감독해야 한다.”

소비자와 재무상담사 간 이해상충 없애야

-금융당국이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미로 들린다. 규제 강조가 차치 상품 개발을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내가 ‘규제’를 말할 때 그런 금융당국이 투자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복잡한 금융상품을 만들어 내지 못하도록 하라는 의미가 아니다. 일부에서는 금융상품을 단순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나는 복잡한 금융상품이 리스크를 줄인 좋은 상품이 될 수 있다고 믿는다. 자동차를 생각해 보자. 나는 프리우스(도요타의 하이브리드차)를 몰지만 엔진의 구조나 작동 방식에 대해서는 전혀 모른다. 그래도 만족하면서 탄다. 투자자가 금융상품의 구조를 모두 이해할 필요는 없다. 투자자 일익상충한다.”

-미국 이외의 나라에서는 어떨까.

“인도 재무장관은 내 논문을 공식적인 자리에서 몇 차례나 인용했다. 위험한 주택담보대출 상품 판매를 금지하고, 미국에서 일어났던 주택담보대출 재앙이 인도에서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한 정책을 지지하는 근거로 거론했다고 한다. 이탈리아는 미국보다 훨씬 앞서간다. 이탈리아 정부는 수십, 수백 쪽에 달하는 금융상품 설명 자료를 소비자들에게 휘 박아 소송을 없애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 대신 그들은 재무상담사의 중요성을 깨닫고 지난해 재무상담사에 대해 국제표준화기구(ISO) 인증 제도를 도입했다. 또 투자자들에게는 제대로 된 재무 상담사를 선택하는 방법 등을 가르치고 있다. 영국에서는 금융감독청(FSA)을 중심으로 금융이해력 교육의 효과에 대한 회의론이 일고 있다.”

이탈리아선 재무상담사도 ISO 인증

영국 FSA도 금융교육 효과에 의문
한국도 교육 만능 정책 재고해야

-한국은 금융교육조차 초기 단계에 있다. 한국의 금융당국자들에게 투자자 보호를 위해 어떤 점을 제안하고 싶나.
“금융교육에 대한 맹신은 뿌리가 깊다. 이제 겨우 변화의 결실을 맺을 수준이다. 그래도 긍정적인 건 정부 쪽에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정부는 금융교육을 위해 ‘금융교육에 반대하며’를 중심으로 금융이해력 교육의 효과에 대한 회의론이 일고 있다.”

-그래서 논문 발표 이후 미국에서 실제 제도가 규정이 바뀌었다.

“미국 금융산업은 시행착오를 겪으며 발전해 왔다. 그러나 한국은 그럴 필요가 없지 않나. 금융교육을 강조하는 단계를 건너뛰려. 대신 독립적인 재무상담사를 어떻게 양성할 수 있는지, 이들을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론 패널로 초청했다. 좋은 점도다. 또 최근에 미국에서는 금융 관련 규제도 ‘디폴트(기본값)’ 조항이 인기를 끌고 있다. 대다수 사람들이 좋은 선택을 내릴 수 있도록 어떤 조건을 기본으로 설정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설명하면 이렇다. 최근 가계수표 발행과 관련하여 통장에 잔액이 없으면 수표 발행이 안 되는 것을 디폴트로 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이전에는 잔액이 없어도 은행은 수표를 발행해 주고 많은 이자와 수수료를 챙겼다. 이제는 이게 기본으로는 안 되고 원하는 사람에 한해서만 디폴트 조항을 없애는 식으로 바뀌었다. 또 신용카드와 관련해 사용한 도를 초과하면 예전에는 일단 쓰게 하고 나중에 비싼 수수료를 물렸지만 이제는 한도를 초과해서는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을 디폴트로 했다. 원하는 디폴트 조항을 없애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선택을 제한하지 않으면서 합리적인 소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내 주장과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투자자 보호를 위해 금융교육이 아니라 다른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는 큰 원칙에서는 일맥상통한다.”

“미국 이외의 나라에서는 어떨까.
“인도 재무장관은 내 논문을 공식적인 자리에서 몇 차례나 인용했다. 위험한 주택담보대출 상품 판매를 금지하고, 미국에서 일어났던 주택담보대출 재앙이 인도에서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한 정책을 지지하는 근거로 거론했다고 한다. 이탈리아는 미국보다 훨씬 앞서간다. 이탈리아 정부는 수십, 수백 쪽에 달하는 금융상품 설명 자료를 소비자들에게 휘 박아 소송을 없애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 대신 그들은 재무상담사의 중요성을 깨닫고 지난해 재무상담사에 대해 국제표준화기구(ISO) 인증 제도를 도입했다. 또 투자자들에게는 제대로 된 재무 상담사를 선택하는 방법 등을 가르치고 있다. 영국에서는 금융감독청(FSA)을 중심으로 금융이해력 교육의 효과에 대한 회의론이 일고 있다.”

-한국은 금융교육조차 초기 단계에 있다. 한국의 금융당국자들에게 투자자 보호를 위해 어떤 점을 제안하고 싶나.
“금융교육에 대한 맹신은 뿌리가 깊다. 이제 겨우 변화의 결실을 맺을 수준이다. 그래도 긍정적인 건 정부 쪽에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정부는 금융교육을 위해 ‘금융교육에 반대하며’를 중심으로 금융이해력 교육의 효과에 대한 회의론이 일고 있다.”

-그래서 논문 발표 이후 미국에서 실제 제도가 규정이 바뀌었다.

“미국 금융산업은 시행착오를 겪으며 발전해 왔다. 그러나 한국은 그럴 필요가 없지 않나. 금융교육을 강조하는 단계를 건너뛰려. 대신 독립적인 재무상담사를 어떻게 양성할 수 있는지, 이들을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